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문제

홍 옥 희

세민환경연구소 소장

머리말 : 무엇이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가?

원전 수거물 관리 시설 유치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과 정부의 갈등은 1990년 안면도 사태에서 처음 비롯되었다. 그 후 1994년에는 인천 앞 바다의 굴업도에서 마찬가지로 사태가 빚어졌으며, 이제 부안에서 다시 이 문제가 심각한 사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 일로 인해서 부안군 주민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 기타 생활상의 불편 등을 생각할 때 정말로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는 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부안 사태는 하루속히 봉합되어야만 하겠다.

하지만 부안 사태는 과거 안면도 사태나 굴업도 사태에 비교해서 훨씬 더 사정이 복잡하며 따라서 그 해결 또한 아직은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이번에는 반드시 원전 수거물 관리 시설 부지를 확보해야만 한다는 정부 당국과 원자력계의 절박성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고, 또 이미 고통을 당할대로 당한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정부의 협상안을 결코 쉽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이 무조건 타협해야한다든지, 잠시 냉각기를 갖도록 하자든지 하는 제안들이 언론에서 간간히 제시되고 있지만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아마도 그동안 쌓인 갈등의 골이 그만큼 크고 심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부안 사태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들도 현재까지는 별로 성공적이지 않는 듯하다. 그리고 이런 판단에 근거할 때, 이 문제가 어느 방향으로 해결 가닥이 잡혀 지든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원전 수거물 관리 시설 건설 문제는 이번 부안 사태의 봉합 여부와는 상관없이 적어도 앞으로

몇 년 내지 10여 년 동안 더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발표의 목적이라고 하겠다.

원전 수거물 관리 시설 건설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갈등을 목도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일차적인 감정은 '불안'이 아닐까 짐작된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의 대다수는 갈등의 한쪽 당사자인 원자력 산업계와 정부(이 둘을 한데 묶어서 '원자력계'라고 하자), 그리고 다른 한 당사자인 시민 환경 단체들의 상이한 주장들에서 적지 않게 혼란을 느끼고 있으며, 바로 이런 이해의 혼란에서 '막연한 불안감'을 안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의 침예한 입장은 그 관리 대상 물질을 한쪽은 '원전수거물'이라고 부르고 다른 한쪽은 '핵폐기물'이라고 부르는 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상 타협이 아예 불가



능할 정도로 그 입장 차이가 현격하다. 그리고 기이하게도(?) 이처럼 양립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두 관점이 우리 사회 내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바로 불안 사태와 같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발표자의 판단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원전 수거물 관리 시설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정부가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설치를 서둘러야 할만큼 그렇게 속사정이 절박한 것인지, 그 속에 저장되는 원전 수거물은 과연 어느 정도나 위험한지,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건설은 꼭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정부와 시민단체, 그 어느 쪽의 주장을 믿어야 할지 잘 모른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불안 사태가 야기된 한 커다란 원인(遠因)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원인(遠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앞으로 원전 수거물 관리 시설 설치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일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하는 것이다.

대국민 설득에 소극적으로 일관한 원자력계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는 한 배출되는 원전 수거물(방사성 폐기물)을 어딘가에는 보관해야만 하고, 따라서 그것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관

할 수 있는 관리 시설(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되겠다.

그리고 사정이 이처럼 명약관화한 것이라면 정부와 한수원(한국전력)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였어야만 했을 것이다. 또 그런 노력의 결과가 지금쯤은 원전 수거물 관리 시설 유치 성공으로 나타났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했는가? 1990년 안면도 사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번 불안 사태에 이르기까지 지난 10여 년 동안 원자력계는 원전 수거물 관리 시설 설치를 위해서 과연 어느 만큼이나 노력하고 적극성을 보였을까?

원자력발전소나 원전 수거물 관리 시설을 유치하는 데에 지역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 나라의 경험에서나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로서나 이미 20여 년 전부터 예상되었던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원자력계는 오로지 금전적인 미봉책과 주민 회유 정책으로만 일관하지 않았던가?

프랑스 정부가 로브 지방에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2년 동안에 무려 400여 차례나 주민 공청회를 열었고(<경향신문> 2001-03-24 시론), 독일 정부가 23년 동안 무려 10억 유로(1조3천

억 원)나 쏟아부었다는 사실(<오마이뉴스> 2003-11-25 인터뷰)과 비교할 때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정부와 한수원이 했던 일은 사실상 언급하기조차 민망할 정도이다.

이처럼 국내 원자력계가 대국민 홍보와 설득에 소극적이었던 결과는 지금 어떤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가? 시민 환경 단체들에 비교할 때 인력과 자금면에서 엄청나게 막강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는 어느 만큼이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따라서 오늘날 불안 사태가 저 지경에 이르게 된 데의 일차적인 책임은 마땅히 우리 정부와 한수원에 귀착된다. 그리고 정부가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점을 깊이 반성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우리 나라 어디에서든 원전 수거물 관리 시설 유치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발표자의 판단이다.

원자력계가 먼저 변해야 한다

기실 정부와 한수원의 소극적인 대응 자세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했던 목소리가 그동안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먼저, 다음과 같은 글을 살펴보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안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처분

장을 빨리 건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국민의 신뢰 및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 집행 의지와 자세를 계속 견지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지역 발전에 함께 기여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해당 지역 주민의 신뢰 구축을 위하여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광범위한 이해 단체나 집단을 대표로 하는 자문 기구를 설치,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긴밀한 협의를 하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이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셋째, 선정된 지역 지방 자치 단체에 시설 건설과 운영의 안전성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일부 부여한다. 여기에는 시설을 감시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데 필요한 재정 지원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시자에게 상당한 권한도 부여하고 독립적 판단과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 글은 2001년 3월 24일자 <경향신문>에 실렸던 이근재 교수의 컬럼에서 인용하였다. 이처럼 원자력계 내부에서도 그 동안 정부와 한수원의 발상 전환과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는 제안들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설적인 제안들이 대부분 무시되었던 나머지 오늘의 부안 사태가 초래되었다고 한다면 과연 잘못된 판단일까?

따라서 부안 사태로 다시 한번 원전 수거물 관리 시설 유치 문제가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지금,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원자력산업계는 이제까지의 관행을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겠다.

다음은 이런 취지에서 발표자가 우리 나라 원자력계에 촉구하는 대국민 신뢰 획득 방안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와 원자력 산업계는 앞서 이근재 교수가 제안했던 것과 같은 건설적인 의견들이 그 동안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제안의 실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심각히 반성해야만 하겠다. 이런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만 비로소 합리적인 대책을 시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원자력계가 이런 반성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듯하다. 필자의 견해로는, 만약 정부와 원자력 산업계가 그런 철저한 반성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 내부의 인적 구성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나라들도 사정이 거의 비슷하고 또 에너지 산업계와 전력 산업계에 있어서도 비슷하지만, 특히 원자력 산업계는 대단히 폐쇄적인 인력 구조와 조직체를 구축하고 있는 이익 집단이다. 다시 말해서, 소수

의 원자력 전문가들로서만 구성되는 독특한 의사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제한된 인적 구성으로 말미암아서 건전하고 진취적인 제안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보수적인 인적 구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제아무리 합리적이고 건전한 제안이라고 해도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원자력 산업계의 인적 개선은 원자력 전문가가 아닌 외부 인사들이 다수 참여할 때에만 가능하다.

방사성 안전성, 원전 수거물 관리, 원자력 환경 안전성, 국가 에너지 정책 등 이제 원자력에 관련된 문제들은 더 이상 원자력 전문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원자력 시설들이 들어서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나아가서 좁은 국토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로 간주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사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산업계가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집단으로 운영되는 한 우리 나라 원자력계는 결코 이런 문제들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 발표자의 판단이다.

이제부터라도 원자력계가 과감히 문호를 개방해서 환경 전문가, 시민 단체 관련 전문가, 대중 홍보 전문가, 경제학자, 언론인, 문필가, 지역 활동가 등을 자신들의 의사 결



정 구조 속에 포함시킬 수 있을 때
에야 비로소 원자력산업과 원자력
계가 국민들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
갈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 정보 공개와 원자력 정보
전문가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원자력계의 문호 개방과 함께 원
자력 정보의 독점 체제를 과감히 풀
어서 먼저 모든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발표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다
분히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원자력
정보의 공개가 아니라 선진국 수준
의 전면적이고 전문적인 원자력 정
보 공개를 의미한다.

에너지원이 철저히 빈약한 우
리 나라의 실정에서 사실상 원자력
이 전력 생산의 가장 중요한 한 축
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
자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적지 않게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저간의 사정이 이렇게 된
데에는 '원전 반대'의 주장만을 되
풀이하고 있는 시민 단체들의 활동
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그 동안 체계적이고 차별한 원
자력 홍보와 대중 설득의 과정을 거
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의 원자력 정책을 고수해 온 정부
당국과 한수원의 처사에도 적지 않
은 책임이 있는 것이다.

비록 시기적으로 크게 뒤늦은 것
이 사실이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루
속히 체계적인 원자력 정보 공개를
서둘러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에 있다고 하겠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원자력
정보의 공개를 위해서 여러 다양한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기
관들은 원자력계가 스스로 나서서
설치한 것이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
가 있다.

이웃 나라 일본이나 미국·프랑
스·독일 등의 원자력 선진국들에
비교한다면 우리 나라의 원자력 정
보 공개의 현실은 그야말로 언급하
기가 민망할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원자력 산업계는 원전 수
거물 관리 시설 후보지 주민들을 대
상으로 각종 홍보를 펼치고 해외 시
찰을 보내주고 하는 등의 선심쓰기
에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런 노력
의 절반 정도만이라도 다른 나라들
을 본받아서 원자력 정보 공개에 나
서는 것이 장기적으로 원자력산업
발전에 훨씬 더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하겠다.

이런 원자력 정보의 적극적인 공
개와 함께 원자력 정보를 국민들에
게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전달
할 수 있는 원자력 정보 전문가의
양성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방사선
안전 문제나 원자력 환경 안전 문제
등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

고자 할 때 원자력 전문가들이 나서
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원자력
전문가가 직접 나설 경우에는 오히
려 대중 설득에 역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보통이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원자력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런 원자력 정
보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된다.

시민 단체들도 현실은 인정해야

국민들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현재의 불안 사태는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정부와 지역 주민, 정부와 시
민 단체, 정부와 이익 단체 사이의
갈등들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갈등의 현상들과 마
찬가지로 불안 사태에 있어서도 갈
등의 한 축인 정부와 한수원뿐만 아
니라 이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하고 있는 시민 단체들도 일정 부분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짐작된다.

앞에서 발표자는 오늘의 불안 사
태가 발생하게 된 가장 커다란 책임
은 이제까지 밀실 행정과 주민 회유
책 위주로 원전 수거물 관리 시설
부지 선정을 밀어부친 정부와 한수
원에 있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그리
고 이제부터라도 이런 관행에서 탈
피하기 위해서는 원자력계가 먼저

나서서 자체의 의사 결정 구조에 분노를 과감히 개방하고, 또 원자력 정보의 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제 이런 제안의 연장선상에서 만약 정부와 원자력 산업계가 새롭게 변모하기 시작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화답으로 시민 단체들은 과연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먼저, 시민 단체들도 그 동안 거의 무조건적으로 원자력과 원자력 발전을 거부했다는 점에 있어서 반성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시민 환경 단체들이 원자력을 죽음의 에너지로 규정한다든지 그 대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선호한다든지 하는 점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제까지 우리 나라 원자력산업이 별로 커다란 대과(大過) 없이 성장을 이룩해왔으며 그 결과 전력 수급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을 성실히 지탱해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해줄만한 아량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자신들의 의사와 상치된다고 해서 반대 의사 표출 방법에 있어서 과연 지나친 점은 없었는지 한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보자는 말이다. 시민 단체들이 원전 수거물 관리 시설 후보지 선정에 대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의사

표명에 있어서 우리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되문고 싶은 것이다.

이제 그 동안의 연륜으로 보거나 사회적 역량의 면으로 볼 때 우리나라 시민 단체들의 수준도 다른 선진국 시민 단체들에 못지않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정한 사안을 다루는 전문성에 있어서나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마치는 말 :
앞으로 10년이 중요하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안 사태는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이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이 갖게 되는 좌절감 등에 비추어 볼 때 하루속히 해결되어야만 하겠다. 하지만 냉정히 평가해서 그런 해결이 쉽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또 설령 불안 사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문제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도 결코 아닐 것이다.

따라서 불안 사태의 해결 여부에 상관없이 정부와 원자력 산업계는 보다 긴 시간에서 원자력과 원자력 산업에 대해 우리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만

이 장기적으로 원자력산업이 살 수 있는 길ियो 또 우리 국민 모두에게 최선의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본 발표자의 생각으로는, 다른 선진국들의 경험을 참조로 할 때 앞으로 10년의 기간이 특히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은 우리 나라 원자력산업에 있어서나 시민 환경 단체들에 있어서나 다 성숙기에 접어드는 과정이어서 드센 기 싸움이 전개될 여지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논쟁이 지나치게 치열하게 전개된다면 필연적으로 그 양쪽 당사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손해가 따르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본 발표자의 제안은 이렇다. 이제 하루속히 정부와 원자력산업계, 그리고 시민단체가 모두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하겠다.

그리고 그런 시도의 시작은 먼저 정부와 원자력 산업계에서 보여주어야만 하겠다. 한쪽에서 이런 시도를 시작하게 될 때 상대방도 따라서 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원자력계가 먼저 변화하고 이어서 시민 단체가 변화하게 될 때 모름지기 우리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의 대열에 설 수 있을 것이리라. ☎